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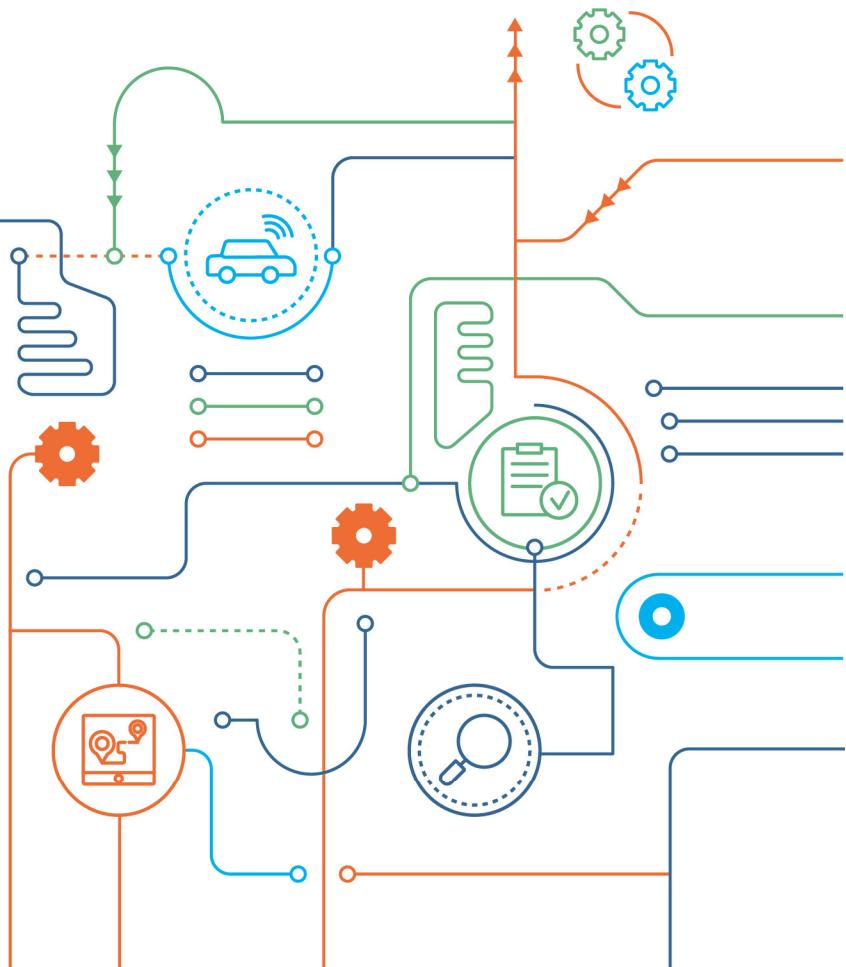
2022-10-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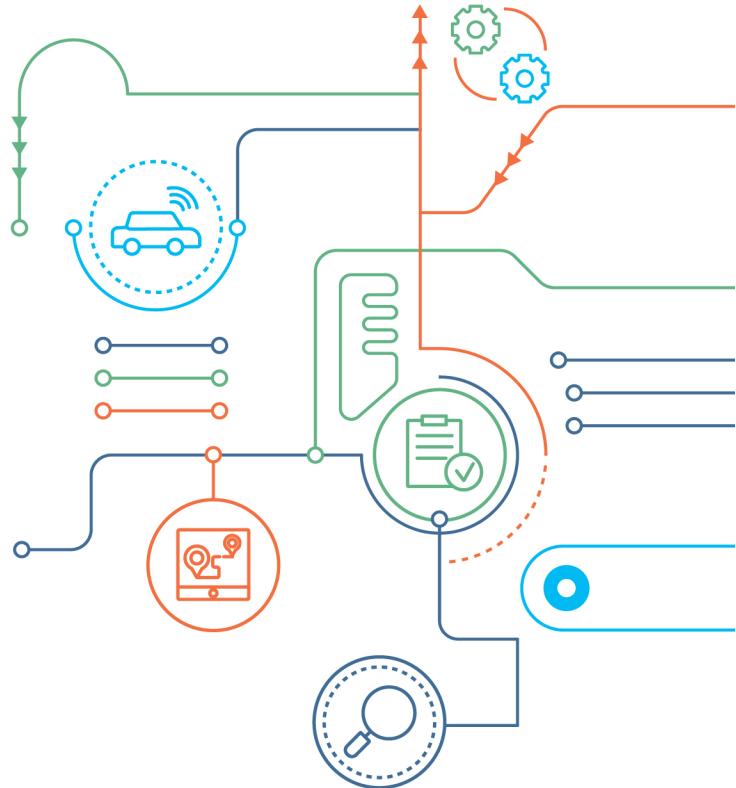
BDI Insights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권태상 · 김민경 · 이동현 · 이한나





Contents

I. 서론	04
II. 평화문화도시의 이론적 토대	07
III. 평화(문화)도시 추진 사례	12
IV.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자원	26
V. 결론 및 정책제언	35

요약

- 최근 평화의 개념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갈등의 평화적 해결, 소수자 보호 등으로 확장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구현하기 위해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임
- 적극적 평화와 평화문화도시론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타 시도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부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평화문화도시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부산은 피란수도 시절 동료 시민들을 포용하고 연대했던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최근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사회문화적 자원이 있고 UN기념공원과 같은 평화공간 및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부산민주공원과 부산시민공원을 공간적 자원으로 가지고 있음
- 평화문화도시 추진 추진방안 제안



I

서론



1. 연구배경

- 부산은 남구 대연동 일대에 소재한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UN평화문화특구’의 운영목적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의 정신적 정체성을 문화화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성지로 특화
 - UN평화기념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대규모 기념관 건립사업의 당위성 확보
 - UN기념공원 및 특구 내 평화, 문화시설 연계활성화를 통한 평화도시 브랜드 강화
 - 평화체험 문화관광 기반 및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최근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특구 내 공원, 기념관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¹⁾
- ‘UN평화문화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문화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도시차원에서 실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 연구목적

- 평화에 대한 연구의 발전 방향 검토를 토대로 평화문화의 역사적 논의과정 및 부산에서 활용하여야 할 평화문화의 가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평화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배경 및 부산에서 평화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전통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주요 행위자는 국가 혹은 UN과 같은 국제기구로 규정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도시 혹은 지역도 주요한 평화구축 행위자로 연구되고 있음

1) 국민의 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시·도공약. 2022. (부산시 공약 – 7.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부산 UN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 부산의 평화문화도시 추진의 문화적 자원과 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② 공간적 범위

-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 소재한 UN평화문화특구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부산의 평화 역사 자원과 관련하여 부산시민공원 등 한국전쟁시기 피란수도 유산과 관련한 지역을 일부 검토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평화학의 이론적 전개과정에 대한 문헌연구

- 평화학은 과거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면서 연구주제를 확장하여 소수자 및 타자에 대한 포용과 환대, 세계적 차원의 인권, 민주주의 등의 문제까지 연구주제가 확장되었음
 - 평화학은 과거 국가, 국제기구 등을 평화구축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였지만 최근에는 지역 단위의 평화 구축활동에 주목하여 도시 및 지역을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서울, 경기, 인천, 히로시마 등 국내·외 평화도시 추진 지자체에 대한 사례 연구

4. 연구체계도

구분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도시의 이론적 토대• 평화문화 및 평화문화도시의 개념
제3장 타 지자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 광주시 사례• 하로시마, 워싱턴, 베를린, 뉴욕 사례
제4장 평화문화도시 주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역사 자원• 평화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공간 자원
제6장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요약• 정책 제언

II

평화문화도시의 이론적 토대



1. ‘평화문화도시’란

1) ‘적극적 평화’론

-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평화학’²⁾이 연구되기 시작함
-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발발이후 전세계적 차원의 반전운동을 계기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적 평화학’이 등장
- 제3세계의 저개발과 내전과 종교갈등에 따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발, 빈곤, 불평등 등의 문제가 평화학의 연구주제가 되었으며 이후 식량, 해양, 환경, 인권 등의 주제도 평화학의 연구주제가 되었음
-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로 평화를 구분하여 평화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물리적 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한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
 - 소극적 평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전쟁과 갈등의 부재를 의미
 - 적극적 평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빈곤, 무질서, 차별 등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황을 의미
 -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는 갈퉁의 주장은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과정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 포르시(Linda Rennie Forecey)는 요한 갈퉁의 평화론을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극적 평화’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이나 전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각종 원인 들이 존재하는 불안전한 것으로 주장
 - ‘적극적 평화’를 위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사회적 정의의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2) 평화학은 폭력과 갈등의 발생과 재생산을 규명하여 갈등의 전환을 평화적으로 모색하는 학문으로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탐구하는 다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문화적, 실천적, 연대적 학문임. 황수환.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 평화학연구 20:1 (2019) : 53-72. p.60.

통해 분쟁의 잠재적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 탈냉전이후 전 세계적 차원의 전쟁위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화학은 종족 및 종교 분쟁, 정체성 갈등, 문화적 억압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대함에 따라 더욱 확대된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됨
 - 국제 사회의 평화학에 입각한 평화논의의 결과 1992년 UN에서 ‘평화를 위한 의제’가 발표되며 평화형성, 평화유지, 평화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1998년 UN은 교육을 평화문화, 지속가능 경제개발, 인권의 존중, 민주적 참여, 관용과 연대, 지식의 소통, 국제평화와 안전 등 8개 항목의 실천을 결의함에 따라 이들이 평화학의 주요 연구의제로 부각 됨
- 평화학은 2001년 9.11테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간 개인의 삶과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지향적이고 생태지향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2)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적극적 평화

- 탈 냉전이후 평화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됨
- 1992년 ‘평화를 위한 의제’에 기반 한 세계 평화를 위한 UN의 노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제도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전 세계적 차원의 제도적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던 소위 ‘선진국’들은 소위 ‘후진국’들에 국제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 소위 선진국은 “훼손된 국가 구조와 능력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관여(간섭)할 권한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³⁾
-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 개입하여 종교, 인종 등에 따른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됨
- 실패 사례에 기반해서 평화학과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노력은 ‘지역으로선회’를 선택하게 됨

3) 이민규.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울연구원. 2021.

- 지역을 강조하는 평화학의 연구경향의 변화는 평화는 분쟁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축 및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은 지역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훌륭한 장기적이 고 지속가능한 자원은 항상 지역 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기반한다”고 주장
- ‘지역으로 선회’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구축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구축의 과정에서 ‘평화도시’론을 제시됨
- 기존의 평화학이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바라봤다면 ‘지역으로의 선회’ 과정에서 개인과 도시를 평화 구축의 행위자로 확장하여 인식하게 되었음
- 개인의 일상적 평화가 국가적 평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장 속에서 국가와 개인을 연결하고 보다 일상에 밀착한 평화구조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평화도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UNESCO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화합과 공존을 추진하는 지역을 평화도시로 선정하고 있음
-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성이 높아지던 시기 미국의 도시들은 ‘평화를 위한 도시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전쟁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⁴⁾
- ‘평화를 위한 시장모임’은 1982년 히로시마 시장이 주도하여 핵무기 폐기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향상하여 핵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바 있음
- 최근에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분쟁 후 파괴된 도시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을 통해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
- 평화도시에 대해 논의할 때 강조될 것은 평화가 달성되었다는 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갈등해결 혹은 갈등조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화,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의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도시 내부의 평화적 갈등 관리와 더불어 외부인(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용과 환대를 보여주는 평화문화도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4) 이창, 이동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구축 도시외교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 네덜란드 도시외교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4 (2021) : 65-88. p.72

2. 평화문화도시 구축과 도시 공간

1) 평화문화 담론형성에서 도시 공간의 역할

- 푸코는 공간을 통해 전개되는 권력의 작동을 ‘통치성’⁵⁾으로 설명하는데 좁게는 국가, 지방정부, 시장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통치 주체가 합리적 목적과 수단을 통한 통치로 정의하고 넓게는 사회구성원의 품행을 특정한 행위로 유도하는 지배 방식으로 정의함
- 푸코의 논의는 20세기 들어 인권, 문화다양성, 성정체성, 젠더문제, 환경문제도 통치성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 현대의 통치술⁶⁾은 공간적 장치와 자기 규제적 규범(경쟁, 기업가 정신의 주입, 창발성)을 통해 인권, 문화다양성, 젠더, 환경 문제를 행위자가 스스로 규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 논의임
- 근대사회의 지방정부는 집합적 소비재를 공급하는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 기능하였다면 현대사회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이후 도시단위 스케일로 정치, 경제단위가 재구조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요 운영주체로 부상하고 있음⁷⁾
- 지방정부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관련 담론을 형성해서 자기 규율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음
- 푸코 이후 공간을 통한 권력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도시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시민들의 담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푸코의 논의를 전유하여 활용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자율적’ 의식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공간 즉, UN평화공원과 같은 공간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음

5)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 미쉘 푸코 저. 오토르망. 옮김. 안전 인구 영토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6) 푸코의 근대의 ‘통치술’의 핵심은 ‘판옵티콘’이라는 공간적 장치가 행위자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게끔 만들었다는 논의임, 자세한 논의는 미쉘이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20.

7) 이경은. 도시공원 조성과정을 통해 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기제 – 여가통치성 장치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p.32

2) 공공공간과 시민 내부의 평화문화 형성

- 공공공간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리적 요소이며 사회의 여러 측면들이 투영되는 장소임
 - “공공공간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가 얹히는 곳이며 종종 다중적이고 다목적 적인 공간”⁸⁾
- 양리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은 “사회가 ‘일차적 자연’이라고 할 때 자재나 에너지같이 감각적인 자료에 기하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이차적 자연’으로 보며 이를 ‘총체성’을 지닌 생산물로 보았음⁹⁾
 - “총체성을 지는 생산물이라는 의미의 공간 인식은 공간을 생산물이자 생산자이고,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토대로 인식하였음
 - “현재의 부산의 공간구조 피란수도 시절 부산이 겪었던 역사적 기억, 전후 경제발전시기에 시민들이 살아왔던 일상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 부산 남구의 UN기념공원은 부산이 겪어야 했던 한국전쟁의 기억이 만들어낸 공간으로 과거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소극적’평화를 기원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음
- 현재는 부산 시민들의 포용성과 타자에 대한 ‘환대’를 보여주는 ‘적극적’평화 지향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UN기념공원을 비롯한 피란수도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산이라는 공간의 존재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치유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¹⁰⁾
- 이와 같은 공간이론을 검토할 때 부산의 남구일원의 UN기념공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기념관 등의 공공공간은 부산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

8) 김지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공간의 다중성 연구: 런던 포춘스트리트 공원과 킹스턴 마켓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2019) : 157-194. p.158

9) 양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27

10) 이현경. '과정(process)'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미술이론과 현장* 28호 (2019) : 61-84. p.77



평화(문화)도시 추진 사례



1. 국내 도시 사례¹¹⁾¹²⁾

1) 경기도 : 분단과 적대의 상징에서 평화·인권 도시로

- 평화의 측면에서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도시 지향을 천명
- 경기도는 최북단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반환되자 이곳을 평화·안보·생태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전쟁의 과거를 평화의 미래로 전환 시도
 - 캠프 그리브스를 민간인 통제선 내 유스호스텔로 개조하여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등을 연계한 DMZ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경기도는 DMZ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를 연결하여 대한민국 최북단에 ‘평화누리 길’을 조성하여 평화도시로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는 DMZ를 활용한 국제평화학술회의, 평화 축제, DMZ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여 DMZ라는 ‘분단과 적대’의 상징을 ‘소통과 평화’의 상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 중
- 경기도는 “민주화와 인권 가치에 대한 각국의 관심 증가”¹³⁾에 대한 대응으로 평화·인권도시로 지향을 추진 중
 - 적극적 평화의 측면에서 경기도는 이민자, 난민, 탈북자, 무국적자 등에 대한 포용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Soft 파워 강화를 추진 중
- 경기도는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침해 구제를 도지사의 구체적인 의무로 규정

11) 권태상.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2021.

12) 국내 평화도시 추진사례들은 공간전략을 통한 평화도시 담론 형성을 추진하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인천, 경기, 강원 등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공간전략과 평화도시 담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반도 차원의 평화 도시 담론 구축에 머무르고 있음

13) 이성우. 인권과 지방정부: 경기도의 지방공공외교. GRI정책 Brief. 경기연구원. 2019. p.1.

〈Let's DMZ 포스터〉



자료 : <https://letsdmz.ggcf.kr/base/main/view> (검색일: 2022.6.10.)

2) 제주도 :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딛고 평화·인권 도시로

- 제주도는 소위 4.3사건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의 과정에 ‘평화의 섬’제주 담론을 개발¹⁴⁾
- ‘평화의 섬’제주 구상을 통해 평화·인권 지향의 도시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제주는 평화·인권 지향의 도시경영과 국제자유도시의 도시 경영을 결합하여 소위 ‘평화산업’¹⁵⁾을 추진
- ‘평화의 섬’ 제주는 역사적 상처의 평화적 극복을 토대로 지정학적 이점에 따른 국제평화교류도시로 기능하며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¹⁶⁾를 의미
 - 대립과 갈등이 없는 평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

14) 권태상.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2021.

15) 평화산업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창훈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관광과 회의산업 그리고 IT, BT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평화를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평화가 더욱 확산되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고창훈. 제주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평화연구 18:1 (2007) : 21-72. ; 제주발전연구원.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기회와 도전. 제주발전연구원. 2008.

16) 고경민, 장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2:3 (2014) : 49-72. p.56

- 지방 -중앙 - 세계의 조화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한 인간의 기본적 생활권이 보장된 복지공동체의 구현
- ‘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된 취지를 살리고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2007년 제정한 ‘제주평화헌장’은 5가지 덕목을 제시

- 1. 천혜의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체를 이룩한다.
- 2.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을 키워나간다.
-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 4.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합의 사회를 구현한다.
- 5.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국제연대를 통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 제주도는 해방이후 4.3 사건이라는 비극적 역사와 더불어 탈 냉전시기 1991년 한-소 정상회의가 개최된 역사를 토대로 국제평화의 가치 실현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제주도는 제주평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제주포럼의 운영을 통해 국제평화 담론을 형성 중
 -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통상부와 제주도의 공동 출연기금을 토대로 설립된 비영리 평화연구 전문연구기관
 -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자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출범

〈제주포럼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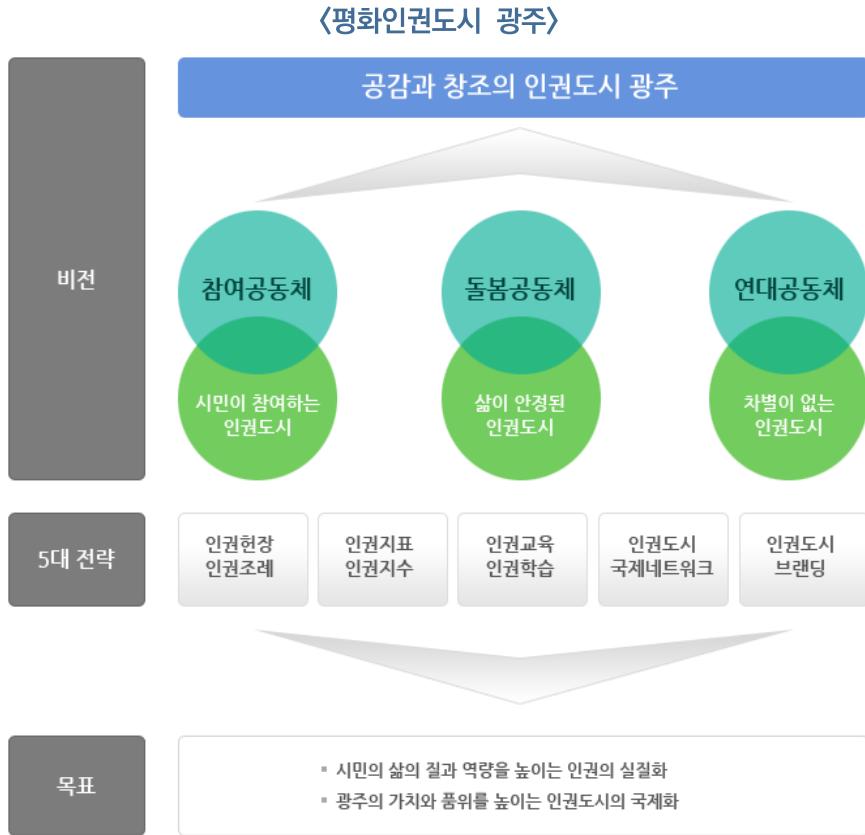


자료 : <http://www.jejuforum.or.kr/index.php?aa=1> (검색일: 2022.6.10.)

3) 광주광역시 : 5.18을 넘어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 광주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현된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과 시민 공동체의 연대 정신을 민주·인권·평화 도시 지향의 토대로 삼고 있음
-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지향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전 세계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2011년 UNESCO로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달성
 - 1998년 아시아 인권현장 광주선언, 2000년 광주 인권상 제정, 2004년 아시아 인권 학교 개설, 2006년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개최, 2007년 세계여성평화포럼 개최,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개최, 2011년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및 2012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¹⁷⁾

17) 권태상,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BDI포커스397 (2021): 9



자료 : <https://gjhr.go.kr/sub/sub.php?subKey=0101010000> (검색일: 2022.6.10.)

- 광주는 도시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삶에서 평화와 인권이 존중 · 실천되는 인권도시로의 지향을 추진 중
 - 5.18 민주화 운동 시기 발현된 시민사회 내부의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신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
- 또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정의로운 경제공동체, 시민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인권도시를 지향
 - 광주시민 · 외국인 등을 포함, 광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조성이 목표
 - 광주를 5.18민주화운동을 활용한 인권, 평화의 가치를 문화를 연결되는 '세계 교류 중심도시'로 발전을 추진

4) 서울특별시 : 시민의 생존, 건강 그리고 행복을 지키는 평화도시외교 추진

-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중심이 된 '보편적인 국제평화'의 담론을 형성을 통한 평화도시를 추진
- 이를 위해 「서울평화포럼」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로 2019년 「서울평화회의」를 개최하였지만 2020년 정책 여건의 변화 이후 「서울 평화포럼」을 본격 발족하지 못한 상황임
- 2021년에는 2년간 이어왔던 서울이 주도하는 평화관련 국제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2022년 본격적으로 「서울평화포럼」¹⁸⁾ 추진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차원에서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하였음
- 남북관계중심의 한반도 평화를 넘어 인류 보편의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시민의 생존,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협하는 이슈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 구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평화조성자', '평화구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함
- 서울시가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노력을 하기 위한 평화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3대 전략과 주요 정책〉

3대 전략	추진전략	주요정책
다자화	'평화구축' 국제기구 중심 다자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구축' 국제기구협력팀 어젠다 선정 · '평화시장회의' 기반 국제기구 활동 점진적 확대
제도화	'플랫폼' 기반 국제 다종 인적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국제평화연구협의체 연계 국제 한반도 연구자 '서울클럽' 운영 · '동북아·동남아 수도 시장회의' 신설,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정책화	'정책형' 평화·안보 공공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와 '설득'의 대미 의원 공공외교 추진 · 국내·외 외국인 대상 평화·안보 교육·교류 프로그램 신설

자료 : 이민규, 앞의 보고서, 2021,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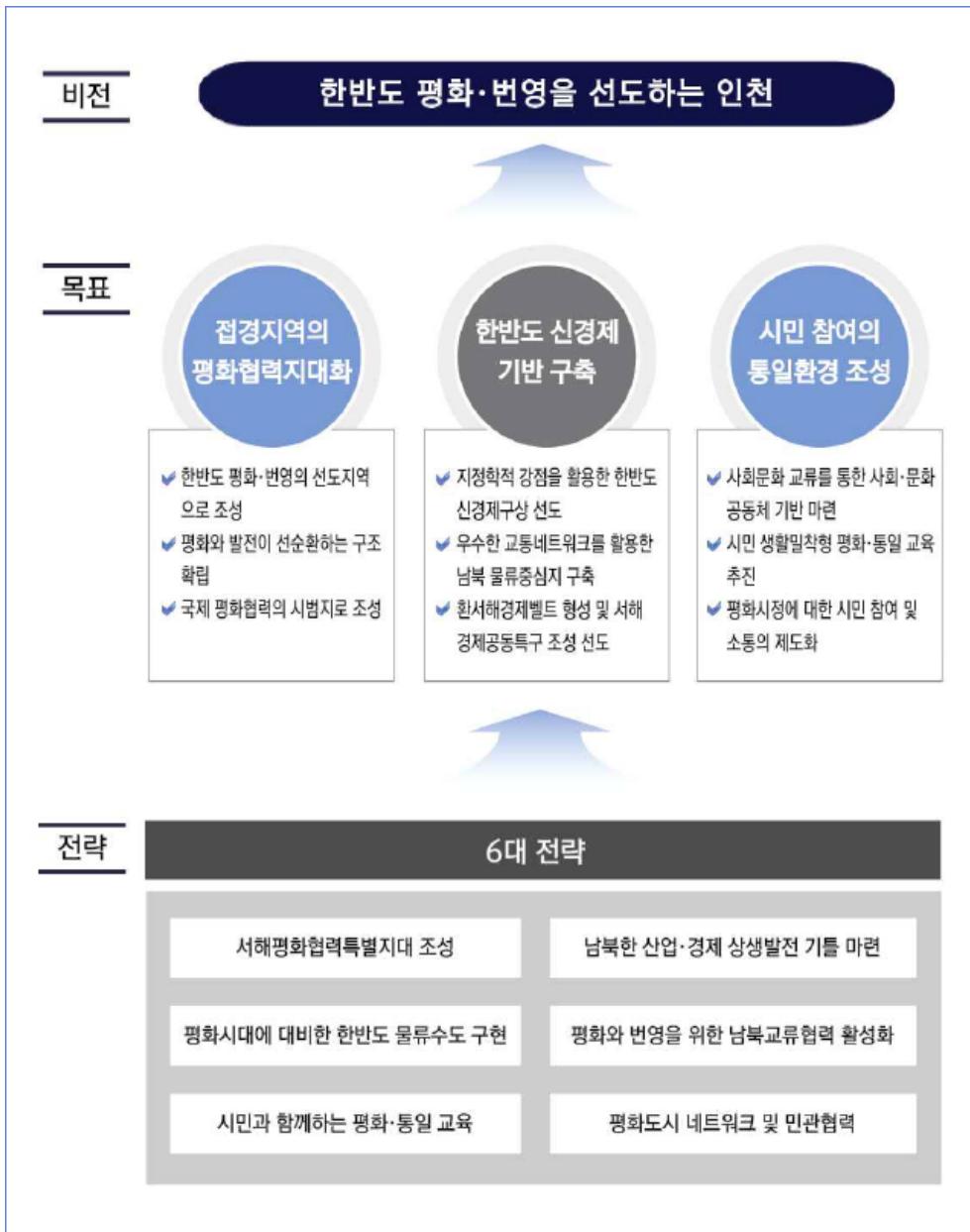
18)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한 문인철 박사에 따르면 명칭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함

5) 인천광역시 :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선도하는 평화도시¹⁹⁾

- 인천은 2018년 10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평화도시를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하였음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긴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협력
 - 평화·통일 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실현
- 즉, 평화 도시 인천은 서해와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반도 서쪽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창출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창출과 평화공감대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임

19) 김창수 외. 남북 평화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인천연구원. 2019. p.21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

〈평화도시 인천의 비전과 목표〉



자료 : 김창수 외, 앞의 보고서, 2019, p.213.

6) 시사점

- 경기, 제주, 광주는 각각 한국전쟁과 분단 직후 혼란,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계기와 DMZ, 4.3관련 유적, 금남로와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경기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제주는 '평화의 섬'제주라는 담론을 구축하고 이를 MICE산업, 관광업과 연계하는 '평화산업'이라는 개념에 기반 하여 평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라는 가치의 산업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평화·인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평화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은 시민의 행복, 안전,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평화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인천은 서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스스로를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주체로 평화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서해상 혹은 경기도 남북 접경지역의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의미의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평화문화'의 조성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국외 사례

1) 히로시마 : 공간을 활용한 '성공적' 평화도시 담론형성 사례

- 히로시마는 과거 일본의 육군의 병참기지로 역할을 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일본의 대표적인 군사거점도시로 기능하였음
 - 1894년 중일전쟁을 통해 군인과 병기 수송을 위한 주요 철도가 연결되었으며, 1945년 히로시마만 지역은 해군 시설과 함께 군사적 특성을 보유
 - 일본 제강소 히로시마제작소, 동양공업, 육군피복지청,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히로시마기계제작소 등 공장이 위치한 무기제조창의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로서 급격한 성장

- 이와 같은 히로시마의 성장 및 입지조건은 히로시마가 원폭투하 지점으로 선정되는 요인으로 작용
-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고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였음
- 히로시마는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화도시’ 담론형성과 이를 위한 공간전략을 선택하였음
-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전략은 원폭투하와 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재건 의지를 보여주는 용어로 시작되었음
- 히로시마 전후복구계획의 일환으로 피폭중심지 주변을 광범위하게 기념지역으로 보존하고 피폭중심지에 평화기념탑을 세우자는 제안을 통해 평화도시를 새로운 도시정체성으로 만들자는 취지였음
-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추진 전략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46년 8월 평화복구시민대회 개최
 - 1948년 11월 히로시마 시당국이 히로시마복구사업을 국가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청원운동 시작(히로시마를 포함한 112개의 도시는 독자적인 전후복구사업을 실시)
 -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복구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원폭피해지인 히로시마에 새로운 평화의 메카를 건설하자는 점을 부각
 - 1949년 8월 6일 ‘히로시마기념 도시건설법’을 제정하고 이 일대를 평화기념시설로서 정비하여 1954년 4월 1일 준공되어 현재의 평화기념공원으로 자리잡음
-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담론 형성을 위한 공간전략의 핵심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이 공간은 ‘원폭투하’로 인한 극심한 피해라는 역사에 근거하여 전쟁과는 무관한 피해자로서의 ‘히로시마’와 ‘히로시마 시민’을 강조하고 있음
- 전후 폐허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반전 반핵 평화의 수호자로 성장한 히로시마를 강조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를 강조하며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보여주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 시민들 역시 평화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도시의 부정적 기억을 극복하고,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²⁰⁾
- 히로시마는 평화도시 담론 형성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비롯한 공간 전략을 토대로

20) 정수희, 김봉채, 이병민,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연구 :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6:2 (2019) :190

추진하였으며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와 관련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성공적으로 평화도시 담론을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음²¹⁾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주변 시설〉



자료 : <https://www.city.hiroshima.lg.jp/uploaded/attachment/32011.pdf> (검색일: 2022.6.10.)

21) 이와 관련하여 히로시마의 평화도시 구축 전략과 관련하여 비판도 존재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정수희, 김봉재, 이병민. 앞의 논문 (2019) : 171-197.

2) 담론 생산을 위한 공간 전략 사례

① 워싱턴 D.C – 내셔널 몰

-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링컨 기념관까지 약 3km의 거리에 참전 용사 기념비 (각각 한국전쟁, 베트남전, 2차 세계대전), 훌로코스트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을 배치한 복합 문화지구
- 미국을 위해 희생을 치른 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위한 위대한 희생과 자유를 향한 도전정신을 배우는 공간으로 조성

〈워싱턴 D.C – 내셔널 몰〉



자료 : washington.org/ko/find-dc-listings/national-mall (검색일: 2022.6.10.)

② 독일 베를린 –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남쪽 베를린 의회와 정부기관이 소재한 구역에 건설된 국가차원의 유대인 훌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 지상의 추모비과 함께 지하의 훌로코스트에 대한 정보센터를 통해 전쟁의 비극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간으로 조성

〈독일 베를린 –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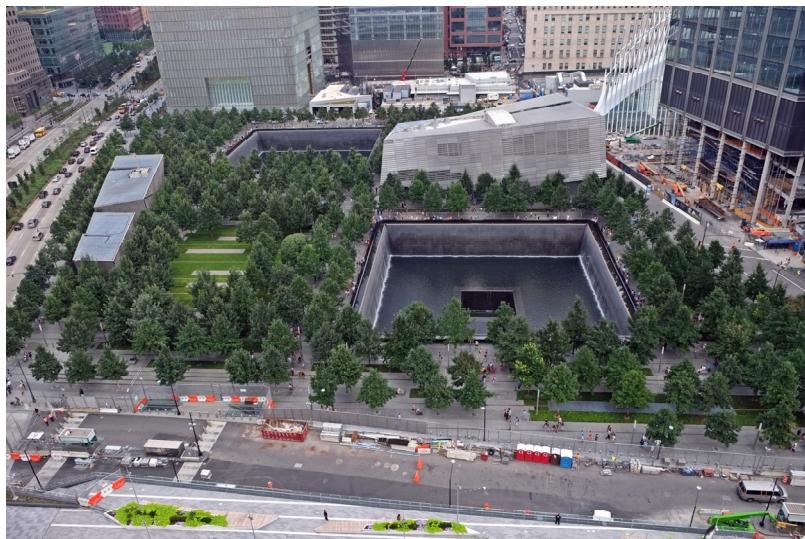
© picture-alliance/Schoening

자료 : dw.com/en/berlin-holocaust-memorial-architect-peter-eisenman-turn
s-85/a-40044198 (검색일: 2022.6.10.)

③ 뉴욕 – 그라운드 제로와 9.11 테러 메모리얼 센터

-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던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추모공원 ‘그라운드 제로’와 9.11 테러 메모리얼 센터를 건립하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

〈뉴욕 – 그라운드 제로와 9.11 테러 메모리얼 센터〉



자료 :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9-11_Memorial_and_Mu
seum_%2828815276064%29.jpg (검색일: 2022.6.10.)

3) 시사점

- 히로시마는 평화공원을 매개로 전후복구와 국제적 평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지만 인권, 평화, 포용성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문화도시’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베를린의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 그리고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는 각각 전쟁과 테러로 인한 학생을 추모하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평화도시의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IV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지원



1.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기억 자원

1) 평화문화도시 부산의 역사적 가치 – 포용과 연대

- 평화문화도시 논의에서 도시 내부의 대화,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역량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부산은 과거 한국전쟁시기 피란수도로 역할을 하며 1,023일간 피란민들을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된 도시의 포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쟁 발발 1년 후 진행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피란민들은 서울 13만 명, 경기도 173만 명, 충남 76만 명, 경북 138만 명 등 전국각지에서 발생하였음²²⁾
- 도시의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부산시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내려온 피란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구인 및 구직 활동의 지원, 구호물자의 보급으로 서로 연대하였음
- 특히, 부산시 차원에서 전개된 ‘방 비워주기 운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간의 연대와 부산시민들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북에서 월남한 원로소설가 이호철의 증언 : “피란 와서 며칠간 머무르던 피란민 임시수용소에서 나올 때 손에 쥐어주면 지금 돈 3~4만원과 피난민 증, 아무 곳이나 거처를 정해도 좋다는 자유로운 허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따뜻한 부산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²³⁾.”

22)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p.31.

23)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p.32.

〈‘한 방 비워주기 운동’ 관련 기사〉



자료 : 1951년 11월 17일, 부산일보

2) 평화문화도시 부산의 역사적 가치 - 국제협력

- 한국전쟁시기 동아시아 작은 나라의 전쟁에 병력, 물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25개국 총 547만 달러의 현금 및 물품지원이 이뤄졌음
-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시설 및 인력, 교육시설 지원, 구호물품의 보급 등 인도주의적 국제연대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함

〈세계 각국의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1956.6.30까지)〉

회원국	약속금액(\$)	현금지원(\$)	물품지원(\$)	지원총액(\$)	미결제잔액(\$)
25개국	5,535,169	4,751,173	723,006	5,474,179	60,990

자료 :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p.34.

- 피란수도 부산의 연대정신은 한국전쟁시기 국제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국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부산 역시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이후 인류애에 입각한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국제 평화 선도도시로 역할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음
- 부산은 UN Week를 통해 평화 담론을 확산하고 세계평화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중²⁴⁾
- 부산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민들과 세계 속 도시들이 공생하고 성장하는 평화를 국제협력과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조성 중
 - ‘UN75 파트너 도시 선정 및 국제평화의 도시(ICP)가입으로 평화실현을 위한 글로컬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부산거주 75,000 다문화 거주민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대주제 속에서 기화 환경위기, 갈등과 폭력, 보건위기, 젠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담론 형성 중
 - SDGs 실천을 위한 시민 캠페인 진행²⁵⁾
- 피란수도 시절이후 부산의 포용과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의 역사적 기억은 현재 UNESCO 등재 신청 작업을 통해 평화를 향한 지향과 인류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 추진 중
 - 고향을 떠나온 피란민의 삶의 애환과 이를 포용하고 시민간의 연대를 실현했던 역사와 국제원조, 머나먼 타국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 등 인류애의 발현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
- 평화문화도시를 위한 부산의 역사문화 자원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로 역할을 하던 시부터 동료 시민들을 포용하고 주변국의 시민들과 연대해 왔던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갈등의 평화적 해결, 인권의 보호와 같은 적극적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억자원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연경심. 부산, 포용과 연대의 세계평화를 이야기하는 도시의 서사: 글로컬 상생협력을 통한 평화 가치 실현. 2022 평창평화포럼 발표자료. 2022. p.29.

25) 연경심, 위의 자료, p.31.

2.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공간 자원²⁶⁾

1)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① UN평화공원

- UN평화공원은 한국전쟁 해외 참전군인들의 묘지로 세계에서 유일한 UN기념묘지로 조성되었음
 - 참혹한 전쟁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을 보여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운영
 -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전 세계인들이 부산과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행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
- UN기념공원에 묻힌 “누군가의 자식, 친구, 연인, 제자 형제자매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들이 지녔던 “고뇌,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 트라우마”와 같은 평범한 일상에 주목할 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음²⁷⁾

〈UN평화공원 국기게양대〉



자료 : https://www.visitbusan.net/index.do?menuCd=DOM_00000020100100100&uc_seq=277&lang_cd=ko (2021.8.6.)

26) 권태상. 부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2021 의 5장 일부를 보완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27) 권기봉 외 국립통일교육원 기획. 대한민국 평화기행. 창비. 2021. p.282

② UN평화기념관

- UN평화기념관은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전쟁의 참상과 정전협정의 무게를 각인시키는 교육적 공간으로, 참전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목적”²⁸⁾으로 건립되었음
- UN 설립이후 전개되었던 한국전쟁 참전을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전시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 세계의 분쟁국과 난민, 대량 살상무기의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고통과 소년병 등의 실태가 전시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평화의 미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음
- UN평화기념관은 전시공간 외에도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평화스쿨」, 「UNPM모의국제회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UN평화기념관은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지향을 부산시민들과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가나가는 공간임

〈UN평화기념관 전경〉



자료 : UN평화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unpm.or.kr/un2022/main.php> (2021.8.6.)

28) UN평화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unpm.or.kr/newhome/sub.php?MenuID=48> (검색일: 2021.08.10)

2) 평화문화도시 구축 노력

① 부산시민공원

- 부산시민공원은 1937년 이후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부터 2006년 까지 미군의 군사기지로 활용되었고 2006년 반환되었음
- 한반도의 냉전역사 속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산시민공원은 지금은 반환당시 미군들의 장교클럽을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공원역사관, 시민휴식공간 등으로 활동되고 있음
- 부산시민공원은 개발압력을 극복하고 부산시와 시민들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공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부산시민들의 평화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임

〈부산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구 하사관 숙소)〉



자료 :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
http://www.citizenpark.or.kr/04_int/int04_1.asp (검색일: 2021.8.10)

② 장기려 기념관

- 부산에 피난을 와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가난한 사람들과 피란민들과 함께 했던 장기려의 인류애적 실천은 곧 피란수도 시절 부산의 연대와 협동의 정신과 연결되고 한 세대를 건너 뒤에서 언급할 이태석의 실천과 이어지고 있음

〈장기려 기념관〉



자료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900&key=20130402.22002210244> (검색일: 2021.8.11.)

③ 이태석신부 기념관

- 장기려박사가 주변의 이웃들을 돋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면 부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결과 후세의 이태석은 세계평화를 그리며 내전을 겪었던 남수단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음

〈이태석신부 기념관〉



자료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1YXN79NKNV&Page=1> (검색일: 2021.8.11)

④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경〉



자료 :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https://www.visitbusan.net/index.do?menuCd=DOM_000000201001001000&uc_seq=275&lang_cd=ko (검색일: 2021.8.11)

⑤ 부산민주공원

- 부산민주공원은 1960년 4월 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시민의 노력을 보여주는 공간임
- 부산민주공원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못생명이 어울리는 세상’, 누구나 귀한 세상을 꿈꾸며 서로 손 마주잡고 철조망을 걷어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²⁹⁾

29)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 http://www.demopark.or.kr/ParkFacilities/parkfacilities_02_01.asp
(검색일: 2021.08.10)

〈부산민주공원 입구〉



자료 : 연구자 촬영 (2021.8.6.)

- 평화문화도시를 위한 부산의 공간자원은 피란수도 시절 형성된 UN평화공원을 비롯한 공간들과 부산 민주공원, 부산시민공원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담은 공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추진방안 제안 및 기대효과

1)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추진 방안 제안

-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의 비전은 ‘모두의 기억을 공유하는 평화문화도시 조성’으로 제안하고자 함
 - 역사적 기억의 공유는 공간의 성격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담론체계를 형성해내며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임
-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역사의) 포용’, ‘(공간의)연결’, ‘(지역의)회복으로 설정하였음
 - 한국전쟁 등 갈등의 역사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과 분절적 공간의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및 이를 통한 지역민들의 새로운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4대 전략으로 ‘평화역사 전승 인프라 확충’, ‘평화문화 콘텐츠 강화’, ‘평화교류 확대와 대내외 외상 제고’, ‘지역사회 밀착형 평화문화 구현’을 제안하고자 함
- 중점사업은 ‘평화역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칭) 부산국제보훈기념관’, ’근·현대 평화역사교육 기반 조성’, ’평화공원(남북)화합의 뜰 조성‘을 제안함
 - ‘평화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 ‘평화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연계 활성화’, ‘평화문화광장 조성’, ‘유엔글로벌 평화센터건립’, ‘세계(남북)평화음악제 개최’를 제안함
 - ‘평화교류 확대와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유엔기념공원을 피란수도 세계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 ‘UN 제 5사무국 유치’, ‘UN워크 등 글로벌 주모행사 품격 제고’, ‘참전국 간 국제문화교류 확대’를 제안함
 - ‘지역사회 밀착형 평화문화 구현’을 위해 ‘평화기원의 숲 조성’, ‘UN 기념거리 조성사업’, ‘특구 내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함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2) 기대효과

- 전 세계를 평화로 연결하는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2030 부산세계 엑스포’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2030 부산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외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세계 유일의 UN묘지를 활용하여 관광, MICE, 예술 공연, 전시 등 ‘평화산업’³⁰⁾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등 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의 평화문화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음
 - 1999년 UN결의안으로 채택된 ‘평화문화에 대한 선언’과 ‘실행계획’을 반영한 평화 문화 실천을 위한 활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UN기념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등 남구 평화문화특구 일대를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15분 도시 조성에 기여
- 세계 유일의 UN묘지를 활용한 평화 교육 및 도시 브랜딩을 통한 도시 위상 강화

2. 정책제언

1) 조례제정 및 보완 관련

- 「(가칭) 부산광역시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 내부의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및 소수자와 타자를 보호하고 환대하고 국제 평화를 선도하고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기초 지자체로는 김포시와 파주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광역 지자체에는 인천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음
-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례에는 UN평화문화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UN이 강조하는 평화문화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도시단위 정책공공외교 강화

- 평화문화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가치를 담고 이를 통한 부산에 대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2030EXPO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외교 추진

30) 평화산업은 평화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의 추가적 지원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경제활동의 수행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제주발전연구원,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기회와 도전, 제주발전연구원, 2008 을 참조

이 필요함

-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 협력 중심의 도시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평화문화도시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3) 민–관 협업체계 구축

- UN평화문화특구 내 기관(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 부산 남구청, 부산 광역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평화기념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등)들 간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필요

■ 참고문헌

보고서, 논문, 학회지, 기관 등

- 고경민, 장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본 도시외교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2:3 (2014) : 49-72.
- 고창훈. 제주평화산업의 전망과 과제. 평화연구 18:1 (2007) : 21-72.
- 국민의 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시·도공약(부산). 2022.
- 권기봉 외 국립통일교육원 기획. 대한민국 평화기행. 창비. 2021.
- 권태상. 부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연구원. 2021.
- 권태상. 호국보훈의 달 6월, 평화도시 부산의 과제.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2021.
- 김귀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22:1 (2006) : 67-102.
- 김지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공간의 다중성 연구: 런던 포춘스트리트 공원과 킹스 턴 마켓 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2019) : 157-194.
- 김창수 외. 남북 평화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인천연구원. 2019.
- 미쉘 푸코 저. 오트르망 옮김. 안전 인구 영토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20.
- 미쉘 푸코 저. 오트르망 옮김. 안전 인구 영토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 양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연경심. 부산, 포용과 연대의 세계평화를 이야기하는 도시의 서사: 글로벌 상생협력을 통한 평화 가치 실현. 2022 평창평화포럼 발표자료. 2022.
- 이경은. 도시공원 조성과정을 통해 본 지방정부의 여가공간 생산 기제 – 여가통치성 장치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이민규.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서울연구원. 2021.
- 이성우. 인권과 지방정부: 경기도의 지방공공외교. GRI정책 Brief. 경기연구원. 2019.
- 이창, 이동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구축 도시외교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 네덜란드 도시외교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4 (2021) : 65-88.
- 이현경. '과정(process)'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미술이론과 현장 28호 (2019)

: 61-84.

정수희, 김봉채, 이병민. 도시이미지의 구축에서 공감의 문제 연구 : 일본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6:2 (2019) : 171-197.

제주발전연구원.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기회와 도전. 제주발전연구원. 2008.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문화와 정치 5:2 (2018) : 5-30.

황수환.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 *평화학연구* 20:1 (2019) : 53-72.

신문, 보도자료, 인터넷 등

Let's DMZ 홈페이지. <https://letsdmz.ggcf.kr/base/main/view> (검색일: 2022.6.10.)

UN평화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unpm.or.kr/newhome/sub.php?MenulD=48> (검색일: 2021.08.10.)

wikimedia.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9-11_Memorial_and_Museum_%2828815276064%29.jpg (검색일: 2022.6.10.)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gjhr.go.kr/sub/sub.php?subKey=0101010000> (검색일: 2022.6.10.)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900&key=20130402.22002210244> (검색일: 2021.8.11.)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DW) 홈페이지. dw.com/en/berlin-holocaust-memorial-architect-peter-eisenman-turns-85/a-40044198 (검색일: 2022.6.10.)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 http://www.demopark.or.kr/ParkFacilities/parkfacilities_02_01.asp (검색일: 2021.08.10)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 http://www.citizenpark.or.kr/04_int/int04_1.asp (검색일: 2021.8.1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1YXN79NKNV&Page=1> (검색일: 2021.8.11.)

워싱턴 DC 홈페이지. washington.org/ko/find-dc-listings/national-mall (검색일: 2022.6.10.)

제주포럼 홈페이지. <http://www.jejuforum.or.kr/index.php?aa=1> (검색일: 2022.6.10.)

히로시마 시 홈페이지. <https://www.city.hiroshima.lg.jp/uploaded/attachment/32011.pdf> (검색일: 2022.6.10.)

2022-10-039



연구책임	권태상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김민경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이동현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한나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원

발행인	허윤수 원장 직무대행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85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SBN	979-11-6886-039-1 9334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